

광주·전남 후보자 평균재산 5억대...16%는 병역 미필

김성모 함평군수 후보 137억원 최고 재력가 48명은 마이너스 재산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주·전남지역 후보의 평균 재산은 5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을 제외한 남성 후보 중 군복무를 하지 않은 군 미필자가 16%에 달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966명(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명 제외)의 평균 재산은 5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재력가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함평군수 후보로 137억 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식 등 유가증권 86억4300만원, 토지 18억9200만원, 건물 12억9400만원 상당이다.

이어 민주당 한양임 북구 기초의원 비례 후보 80억4600만원, 평화당 박정재 여주시의원 후보 79억 1400만원, 민주당 허정임 함평 기초의원 비례후보 77억8100만원, 평화당 정연선 신안군수 후보 70억 1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억원 이상 재력가는 49명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 박형출 구례군의원 후보는 -25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처럼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는 48명이나 됐다. 재산을 '0'이라고 신고한 후보는 9명이었다.

또 전체 후보자 966명(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4명 제외) 중 여성 121명을 제외한 남성 후보 757명의 16%인 121명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후보 15명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에 출마한 14명 중 3(21.4%)명이 군 미필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대석 후보, 남구청장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박용권 후보, 북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인 후보가 군 미필자다.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 후보 72명(여성 후보 1명 제외) 중 14명(19.4%)도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지역별 군 미필자는 나주시장 후보 강인규(더불어민주당)·김대동(민주평화당), 광양시장 후보 김현옥(바른미래당)·이육재(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강승환(바른미래당), 곡성군수 후보 박용두(정의당), 고흥군수 후보 송귀근(민주평화당), 보성군수 후보 김철우(더불어민주당)·하승완(무소속), 강진군수 후보 광영체(민주평화당), 무안군수 후보 김호산(민주평화당)·김재훈(무소속), 함평군수 후보 김성모(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임흥빈(무소속) 등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군 미필자 17명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5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엄지척...선거사무소 개소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마라톤빌딩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미애 대표(왼쪽부터)가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 후보 몰려...광역단체장 17곳 기초단체장 219곳 후보 내

2016년 총선에서 형성된 다당제 구도하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25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를 기준으로 하면, 각급 선거에서 여러 당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17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제외한 15곳에, 바른미래당은 강원·충남·

전북지사를 제외한 14곳에 후보를 출격시켰다.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 등 2곳에 후보를 세운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후보를 내지 못했다. 정의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비롯해 9곳에 후보를 등록했다.

17개 선거구 대부분에서 여러 당의 후보가 격돌하지만, 강원지사 선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후보를 내 양당 구도가 형성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226곳 역시 민주당이 정당 중

가장 많은 219곳에 후보를 냈다.

한국당 후보는 187곳에 출마했다. 그러나 여주시장과 군산시장을 제외하고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99곳, 평화당은 44곳, 정의당은 15곳의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도전자가 나왔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737개 선거구 중 704곳에 후보를 내 정당 중 가장 많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 6명 모두 병역필 재산은 2억대부터 10억원대 고루 분포

집회및시위 위반 전과 1건

직업은 대학교수 2명 무직 2명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된 6명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최영태 후보는 공군 대위로, 장휘국(광주시교육감)·오인성(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육군 하사로 전역했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모두 육군 사병 출신이다. 후보자 6인의 재산은 적게는 2억94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530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27일 중앙선거위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 후보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만료했고, 장휘국 후보는 육군 하사로 제대했다. 최영태 후보는 교육감 후보로는 유일하게 장교인 공군 대위로 전역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고석규 후보는 육군 병장으로, 오인성 후보는 육군 하사로, 장석용 후보는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후보자 재산 신고액은 광주시교육감의 경우 이

정선 후보 10억3600만원, 장휘국 후보 6억9000만원, 최영태 후보 9억6800만원이었다. 전남교육감의 경우 고석규 후보 10억5300만원, 오인성 후보 7억800만원, 장석용 후보 2억9400만원이었다.

장석용 후보는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과 1건을 신고했다. 죄명은 업무방해·집회및시위위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003년 12월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장 후보 측은 "신고된 전과는 장 후보자가 2002년 10월 전교조 중앙 사무처장 재임시 '입시경쟁교육 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며 진행된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말했다.

후보자 직업은 이정선 후보는 대학교수, 장휘국 후보는 광주시교육감, 최영태 후보는 대학교수, 고석규 후보와 오인성 후보는 무직, 장석용 후보는 전남교육포럼혁신과미래 대표라고 신고했다. 고 후보의 경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정년을 4년가량 남겨두고 교수직을 명예퇴직했으며, 나주교육장을 지낸 오 후보는 올 초 정년퇴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국 평균 경쟁률 2.32대1...광역단체장 4.2대1 경쟁

서울시장 9명 등록 최고 경쟁률

12곳 국회의원 재보선 3.8대1

6·13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이 2.32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모두 9317명이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1명이 사퇴해 최종 경쟁률은 2.32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

(2.28대 1) 때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방선거는 2006년 5·31 지방선거로 당시 경쟁률은 3.2대 1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17명의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 5명의 교육의원(제주) 등 총 4016명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자를 선출한다.

선관위 최종집계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71명이 등록을 완료해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757명이 등록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많은 9명이 후보로 등록해 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시장과 경기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선거에는 각각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2명(더불어민주당 최문순·자유한국당 정장수)에 그쳤다.

광역의원은 1889명(2.6대 1), 광역비례 300명(3.4대 1), 기초의원 5335명(2.1대 1), 기초비례 897명(2.3대 1), 교육감 61명(3.6대 1) 등으로 집계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